

업무보고 대신 현안토론...확 바뀐 업무 인수인계

광주시·전남도 민선 7기 출범 위한 본격 행보

6·13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선인들이 주요 사·도 현안에 대한 업무 점검을 하는 등 민선 7기 출범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는 광주시 주요 현안 중심으로 업무 파악에 돌입했고, 전남은 취임준비기획단에서 업무보고 대신 주요 현안 파악에 나섰다.

광주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9일 서구 광주도시공사 본사에 꾸려진 혁신위 사무실에서 광주시정 실국 관계자들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당선인 측에 시정 직원들이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기존의 단순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자치행정 분야, 시민안전 분야, 환경생태 분야별로 열렸고, 광주수영선수권대회 등 현안별 회의도 곁들여졌다.

특히 민선 7기에 공론화 과정을 다시 진

광주혁신위·실국 관계자 회의

7개 분과별 핵심 현안 점검

전남지사 취임준비기획단

21일 현안 보고·공개 토론회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해당 실국의 보고가 길어졌고 실무진과 혁신위 간 열띤 토론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측 한 관계자는 "새로운 민선 시장이 업무 파악을 위해 실국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이 아닌 주요 현안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3차례 가량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광주시정의 현안 설명에 이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추가 회의도 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 같은 보고와 토론을 곁들인 회의 형식으로 ▲시민주권 ▲일자리경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정영택 본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문화관광체육 ▲복지여성 ▲환경교통안전 ▲도새재생 ▲민주인권평화 등 7개 혁신위분과별로 2-5개의 핵심 광주시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7월 2일 민선 7기 출범을 앞둔 혁신위의 활동 기간이 2주일 남짓에 불과해 충분한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취임준비기획단은 형식적 업무보고 대신 실국별 현안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견철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총무·공보·취임준비 등 4개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책평가팀과 실국별 현안 점검과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지난 18일 민선 7기 전남도지사 취임준비기획단을 출범하고 전남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청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안 보고는 두 차례만 진행한다. 오는 21일 실국별로 현안 보고를 하고, 26일에는 당선인 공약 점검을 할 예정이다. 현안 보고에는 관련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공개한다. 전남도 실·국장이 현안 보고를 하면 기획단장과 자문위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질의·토론하는 형식이다.

이견철 기획단장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게 당선인의 뜻"이라며 "업무보고 대신 당선인이 꼭 알아야 할 도청 현안과 즉각 조치해야 할 사안, 공약 실천 방안 등을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공개 토론회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서 연결 새 축...경제성 떠나 착공 서둘러야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선인 상생이슈 이것부터 해결

<3> 경전선 고속화·31사단 이전

경전선 고속화사업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해 풀어야 할 지역현안이다. 이 사업은 광주역 기능 상실, 지역 내 유동인구 급증, 영·호남 간 교류 촉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1항토사단의 이전 문제로 민선 7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와 함께 민선 6기가 닦은 상생의 틀을 더 크고,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공동현안에 대한 위원회 및 자문단을 함께 구성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이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벨리 사업은 물론 문화콘텐츠(광주)+인문·자연자원(전남), 자동차·가전(광주)+철강·조선(전남), 의료(광주)+관광(전남) 등 미래전략산업들이 모두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상

4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올 설계비 48억원 예산 반영 필요성 제기된 31사단 이전 실무적 논의 이제 시작해야

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조율, 배려, 양보 등의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경전선 고속화사업 토론회'를 계기로 올해 내 착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 고속화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만 4년째 계속했으며, 2015년 경제성 분석(BC)이 0.55, 2016년 0.74, 2017년 0.81로 1.0 미만이다. 올해 경전선 사업 설계비 48억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 송정-화순-보성-순천을 잇는 116.5km의 단선 구간

을 2조3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전구간 신선 건설 방침에서 광주송정-나주 노안 등 4개 구간 29.6km는 기존선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선이 전철화되면 광주-부산 철도 소요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국토 남부의 1200만 인구 경제권 형성, 영·호남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남북 중심의 고속철에서 소외된 지역이 동서를 연결하면서 철도 수혜지역을 늘리는 효과도 발생한다.

이 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본부 부 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제성분석 제도 개편을 통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을 높게 조정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반시설을 먼저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촉진하고, 경전선 전 구간으로 영향 범위를 조정할 경우 통행량이 19~20% 증가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 오차·삼각동 일원에 자리한 31항토사단의 이전 문제로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지난 2014년 광주시의 요청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실무적인 논의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 174만㎡ 중 147만9000㎡가 이전대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8000억원의 이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10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 공항 및 평동사격장 이전 등 우선 사업에 밀려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전선 전철화와 31항토사단 이전 문제 외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 전반에서의 상생 기조를 굳건히 해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와 전남의 기반산업, 미래전략산업 등이 모두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인재 육성·현장 공급, 제조 생산·소비 등에 있어서 협조 및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주공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민선 6기의 상생은 각 사업에 대한 협조가 강조됐다면, 민선 7기의 상생은 지역미래의 근간부터 고민해서 상호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력도 갖춰야 한다"며 "소지역주의를 탈피하고 더 큰 계획을 수립해 사·도가 가진 잠재력, 자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전대 '불의 전쟁' 시작

차기 지도부 역할론 갑론을박 지도체제·경선방식도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당대회 준비를 위한 경선 '불' 마련을 위한 물밑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지도부의 역할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일단 당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으나 차기 지도부의 성격에 놓고선 '관리형'과 '책임형'으로 의견이 갈린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변경 정책은 물론 민생·개혁과제를 잘 뒷받침해야 한다"며 "관리형 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이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을 반성하며 차기 지도자가 새 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형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클 수 있는 당 대표가 뽑혀야 한다"며 "관리형이 아니라 민주정부 3기를 당·정이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4기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도체제와 경선방식 등 차기 지도부 구성의 향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불의 전쟁'도 예고됐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서느냐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골간으로 하되, 기존처럼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 그리고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추미에 대표가 승리한 지난 정당대회에선 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30%), 일반 여론조사(25%)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후 바뀐 당규에선 대의원·권리당원(85%), 일반 여론조사(15%)를 합산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권리당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권리당원 반영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